당정, 금융사 CEO 연임요건 강화… “참호구축 원천 차단”

지배구조 개선 방향 당정협의
임추위·주총 문턱 단계적 상향
“셀프·장기연임 등 관행 개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

연임 시 의결 요건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4분의 3 이상 찬성,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등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임추위와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강화로 현행 CEO가 참호를 구축하는 걸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며 “핵심 상황은 전 금융회사의 독립이사제를 독립하고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은행지주 CEO 장기 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CEO 선임, 임추위,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선임될 때는 임추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시 연임될 경우 4분의 3 이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주총으로 넘어가면 선임 시엔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표결이 있어야 한다.

연임하게 될 경우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이후 또 다시 연임할 경우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기관 투자자 독립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도 거론됐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기간 비율 강화, 성과 보수환수제 도입을 통해 성과 보수 관련 주주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퇴직금 환수 방안도 논의됐냐’는 질문에 “성과보수금과 퇴직금은 다른 제도라 여기 포함 대상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돼왔다”며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는 받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도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개선방안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스스로 견제할 수 있게 하며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현직 CEO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 이사로 구성하고 은행 지주 CEO의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주주에게 독립 이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독립 이사 간담회 의무화 및 이사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임원 보수 지급 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와 성과 보수 환수제를 도입해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합리적 보수 체계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주주의 참여와 감시가 살아있는 지배구조는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직 CEO의 임추위 및 경영 승계 절차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금지하고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독립 이사들이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 활동 내역 공시 강화, 평가 체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서울 집값 92주째 상승… 성북구 0.39% ↑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 0.07% ↑
반도체 거점 인접 경기 남부지역 강세

서울 집값이 92주째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에 이어 성동·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향 조정 거래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전주 -0.39%에서 -0.25%로, 서초구는 -0.37%에서 -0.2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반면 송파구는 -0.17%에서 -0.3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잠실·가락동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 지역에 합류했다. 성동구는 전주 0.07% 상승에서 0.02% 하락으로 전환했다. 옥수·하왕십리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강동구도 전주 0.03% 상승에서 0.01%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전주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성북구는 전주 0.30%에서 0.39%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릉·돈암동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올랐다.

노도강 3개 구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0.14%에서 0.20%로, 도봉구는 0.20%에서 0.22%로, 강북구는 0.26%에서 0.32%로 각각 상승했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관악구는 0.20%에서 0.23%로 상승폭을 키운 반면 금천구는 0.30%에서 0.27%로, 구로구는 0.25%에서 0.24%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20%에서 0.2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상승률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거점과 인접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용인시 기흥구는 영덕·동백동을 중심으로 0.63% 상승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주(0.60%)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으며 경기 평균의 3배 수준이다. /뉴시스

김정관 장관 “체코원전사업 복원·정상화”

내년 7월 이전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무산 위기에 처한 체코원전사업의 복원·정상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상대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내년 7월 이전에 신규 시공사 선정도 마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 및 2029년 11월 착공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지키고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전 공기업이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도록 정부의 관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규시장에 신규노형으로 진출하는 경험을 기업 간 공유하고, 정부가 행정적·외교적 지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모색함으로써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또 “체코 정부와도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27년 7월 신규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작년12월 계약체결 후 두코바니 원전 설계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착수 후 15개월간 3800여 건의 설계문서를 적기에 제출 완료했다”며 “체코 현지 엔지니어링사와 1차 설계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고 추가 계약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체코 법령 요건과 철저한 설계를 통해, 5개월 후 예정인 건설허가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PS의 김홍연 사장은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 승인을 위한 기술자료를 제출하는 등 체코 측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40년간 축적된 국내외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에서의 역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팀코리아 참여기업들은 원전 계약체결(작년 6월) 이후 16개월간 각자의 부문에서 역무를 수행하며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설업 회복, 민간 투자·착공여건 개선 필수”

›› 1면 ‘뛰는 집값에 전세대란’서 계속

불안한 전세시장은 월세와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증금 마련 부담이 커지고 금리 부담이 전월세 상승률을 넘어설 경우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받치면서 임대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일부 옮겨 갈 가능성도 있다.

공급 지표도 크게 개선될 기미는 없다. 공공에서는 공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더디다.

내년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24만 호로 올해 전망치 23만 호보다 늘 전망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로 공공부문이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 인·허가는 내년 40만 호로 올해 41만 호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 부문은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늘지만 민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브릿지론 조달 부담과 미분양 우려로 28만 호에서 26만 호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내년 건설 경기 역시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건산연은 올해 건설투자는 264조8000억원으로 하반기 소폭 반등에도 연간 기준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건설투자는 270조4000억원으로 2.1% 증가할 전망이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첨단산업과 공공수요가 건설경기의 회복을 뒷받침하겠지만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착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